

# 한일, 북도발·북러 무기거래 규탄...위안부 판결엔 입장차

###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82분 회담, 예정시간 훌쩍 넘겨 박진 “2015년 합의 존중, 미래지향적 관계 모색 노력”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3각 공조 속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본 측 입장에 근거한 언급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 법원의 위안부 판결 소식 직후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어 연장 선상에서 우리 정부 측에 강력히 항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

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양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해역 문제를 둘러싼 확전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박 장관은 (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동 합의문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의 표현에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합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돼 왔고 논박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데 방침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양 국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보태어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동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당국자는 "양 장관은 지난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러 무기 거래 등을 포함한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이 계속해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는 지난 17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견을 나눈 한일 및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재차 합의했다. 최근 이스라엘 체류 양국 국민의 긴급귀국 지원이 이뤄진 것과 같이 영사 당국 간 공고한 협력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또 일본이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9시2분께 시작돼 오전 10시24분에야 종료됐다. 당초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82분간 진행된 것이다.

우리 측에서는 정병원 차관보와 이동렬 장관특별보좌관, 김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임수석 대변인, 이한상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서민정 아태국장, 유준경 아태1과장이 배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기 위해 악수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고바야시 마키 외무보도관, 미바에 다이ске 아시아대양주심의관, 고다이라 미쓰루 대신비서관, 요시히로 도모코 북동아1과장이 함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9월 취임 후 첫 방문이며,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 15

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후 11일 만이다.

박 장관은 일본과의 양자 회담 후 양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후 한일중 외교장관은 오찬을 함께한 뒤 3국 회의에 참석한다.

김혁면기자

## 민주 “전산망 장애의 원인은, 일주일 지나 네트워크 장비 연결 불량 ...허탈·한심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세계 1등이었던 전자정부의 추락,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주일 지나서야 밝혀진 전산망 장애의 원인은 더욱 기가 막히게 한다"며 "외부의 해킹도 아니고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단지 불량 때문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작은 부품 하나에 국가의 행정전산망이 완전히 셧다운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열흘 가까이 조사한 결과 고작 단지 불량이라니 허탈하다. 정부의 말을 100% 믿어야 할지 의심스러운 정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전산망 관리의 기본인 유지, 보수,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방치했다는 말인가. 영세한 기업도 이렇게 영터리로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명이 안 되는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전 정부 때려잡고 야당 괴롭히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을 아예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해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뻔뻔한 태도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며 "국민은 먹통이 된 정부의 책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 민주 “정부여당, 예산안 자동부의 악용 의도...수정안 마련할 것”

### “정부여당, 예산안 심사 지연...특활비 등 합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라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지연 이유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되는 것을 악용하려는 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노린다면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홍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야당이 찾아다니며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반복되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다음 날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자동부의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의 의도에 맞서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60개 부처 대상 663건의 감액 심사를 했지만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R&D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예산,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확인된 기본 경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활비도 삭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국민께 약속드린 R&D, 재생에너지,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그리고 새만금 등 5대 미래에 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5대 생활예산 증액 심사도 정부여당의 시간끌기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총지출을 늘리는 증액까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